■제이유 그룹 로비 의혹 수사 확대 '일파만파'

"사상 최대 사기 사건 될 수도"

검찰총장, 수사팀 확대 지시

차장검사 누나 '돈거래' 포착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신사동 제이유그룹 본사에는 중국진출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등 검찰의 수사 확대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느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수사팀을 확대 개편해 그동안 제이유그룹을 둘러싸고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한점 의혹도 남김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이날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 사건이 사상 최대 사기 사건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용한 검찰력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장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약 34만명이 연루되고 피해액이 4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사기' 사건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전날 선우영 서울동부지검장으로부터 제이유 그룹 로비 의혹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가족들이 관계돼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검사를 4명에서 7명으로 늘림에 따라 수사팀을 지원하기 위해 계좌추적과 회계분석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울지검 K차장검사의 누나가 2002년 7월 벤처사업에 투자해달라는 명목으로 주수도(50) 제이유 회장의 최측근 한모(45)씨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가 이듬해 1월 5천200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이 한씨 집에서 압수수색한 선물리스트에는 누나의 이름이 아닌 K차장검사 본인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K차장검사가 누나의 돈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돈 거래 과정에 부정한 청탁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검찰은 형사6부 김진모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이었던 수사팀에 공안담당 검사 2명과 부부장 검사 한 명을 더 투입해 수사팀 검사를 7명으로 늘렸다.

검찰은 또 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제이유그룹을 고발해 오기로 함에 따라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제이유 쪽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승호(43) 총경도 제이유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서해유전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 지검 부장검사였던 A씨가 주수도 회장에게 서해유전 탐사권자인 지구지질정보 사장 이모씨를 소개해 제이유가 서해유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주 회장 측근 한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치안감급 경찰간부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좀더 실시한 뒤 구체적 소환 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DJ 노벨상 6주년 '한반도 평화의 밤' 행사

내달 7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6주년을 기념하는 '한반도 평화의 밤' 행사가 다음달 7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다.

김대중평화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북한 핵실험 사태로 불거진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감안해 '한반도 평화'라는 단일주제로 어느 때보다 성대한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우선 주한 미 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과 루추톈(盧秋田) 전 중국인민외교학회장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미관계 발전 공로로 수여하는 '벤 플리트상' 수락연설을 통해 북핵실험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 온 북미 직접대화 해법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의 밤' 행사준비위원회의 백낙청 공동위원장은 "국민과 전세계는 당사국간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북핵실험으로 한반도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걷어내는데 김 전 대통령이 추구해온 평화와 화해의 정신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 정부 시절 장·차관, 여야 각당 대표, '코리아 소사이어티'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美 하원의원들 개성공단 첫 방문

미 하원 의원 6명이 개성공단을 찾을 예정이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짐 맥더모트 의원을 포함한 미 하원의원 6명이 다음 달 1일 개성공단을 방문키로 함에 따라 초청장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북측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초청장을 발급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유럽연합(EU) 의원들과 미 의원 보좌관들이 개성공단을 찾은 적은 있지만 미 하원의원들이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광주 '영구 평화시위' 선언을

김주정
사회1부 차장

'강원도청 1천965만원, 충남경찰청 3천900만원, 충남도청 2억100만원, 광주시청 4억2천만원'

지난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폭력 시위로 공공기관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환산한 액수다. 집회가 서울·광주 등 전국 13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는데, 춘천·대전·광주에서만 폭력시위가 벌어졌고, 그 난폭함의 도(度)는 광주가 단연 1위였음을 증명하는 '성적표'이기도 하다.

광주시의 대응 또한 강경했다. 박광태 시장은 시위 뒷날 기관장·시민사회단체장 연석회의를 열어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시민들도 "5·18 때도 시청사에 돌을 던지지는 않았다"며 시위대를 보는 눈이 싸늘해졌다.

전남경찰도 시위 주동자 6명을 구속하고, 관련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이들 단체 집행부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압박을 가했다.

시위를 주도한 '한미FTA협상중단 광주전남운동본부'도 방어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당시 상황은 폭력시위가 아니라 우발적인 충돌 이었다"며, "생존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농민의 염원을 폭력시위로 비하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과 시민의 재산인 시청 유리창이 파손된 것에 대해 시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지만, 광주시청이 손해배상을 논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구속자를 석방하고 평화시위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이 의도했든, 않았든 간에 FTA반대집회가 폭력사태로 변질되는 것을 막지 못함으로써, 'FTA반대'라는 명분은 흐려지고 '광주가 폭력의 도시라는 오명을 써선 안 된다'는 대의(大意)가 부상하게 한 셈이다.

다행히 집회 주최 측은 몇 차례 광주시청을 방문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폭력시위 피해는 돈으로 물게하고, 전원 형사고발한다는 정부방침에 밀려서 그런 것은 아니리라고 본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회원 중에는 "노동자·농민의 절박한 심정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변했더라면, 정부 협상에도 힘이 됐을 텐데 폭력시위로 망쳐놨다"고 자성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광주는 의병·독립운동·민주화운동 등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앞장서 돌파해온 '등불'이었다.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에서 폭력시위는 더 이상 없다"는 '영구 평화시위선언'을 먼저 하고, FTA저지운동에 나선다면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jjnews@kwangju.co.kr